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6. 7. 1.(수)
전송매수 : 총 10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7. 1.(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허영호 홈플러스 공대위 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김광창 홈플러스공대위 공동대표(서비스연맹 위원장)
 - 현장발언 : 손상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1 :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3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홈플러스 공대위 입장문 전달**

홈플러스 공대위 “10만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달렸다...이재명 대통령 직접 결단해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홈플러스 공대위)가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7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기한을 앞두고 법원이 청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10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창 홈플러스 공대위 공동대표(서비스연맹 위원장)는 취지발언에서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농어민들의 판매망과 생존권도 무너진다”며 “홈플러스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10만 명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는 약속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손상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특히 온라인 배송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운송대금 미지급으로 영세 운송업체들이 배송업무 중단을 통보했고, 오늘부터 온라인 주문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온라인 사업은 유통기업의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홈플러스가 멈추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0일이 넘는 단식농성 속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정부의 침묵”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 매출 8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2위 유통기업이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그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 삼보일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제 정부와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실업급여 부담과 지역경제 붕괴 비용, 국민연금 투자 손실까지 고려하면 청산은 결코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가동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상화와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은 특정 자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악랄한 투기자본 때문에 홈플러스 구성원들의 생존기반에 무너졌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고 규탄하며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자본 MBK의 먹튀 경영이 초래한 결과이며, 피해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2만 명의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납품업체, 입점업주, 운송·물류 노동자 등 10만 명의 생존이 함께 무너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홈플러스를 청산이 아닌 회생으로 이끌고,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원의 회생 결정, MBK와 메리츠의 책임 있는 자금 조달을 거듭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취지발언 : 김광창 홈플러스 공대위 공동대표
3. 현장발언 : 손상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
4. 발언 1.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5. 발언 2.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6.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결단하십시오!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3일이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도래하고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홈플러스는 청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자본 MBK가 벌인 먹튀 경영의 결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2만 직접고용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납품업체, 입점업주, 운송·물류·용역 노동자, 지역 소상공인까지 10만 명의 생존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경제의 문제이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사회적 재난입니다.

노동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정부의 답을 기다렸고, 대주주와 채권단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MBK와
메리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정부의 결단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플러스를 청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직접 나서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청산이 아닌 회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MBK와 메리츠는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즉각
책임지십시오.

하나, 정부와 금융당국, 수사기관은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MBK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금융제재에 나서는 한편,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홈플러스는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민생의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노동자의 일터가 있고, 중소상공인의 삶이 있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2026년 7월 1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2. 취지발언_김광창 홈플러스 공대위 공동대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 공동대표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광창입니다.

7.3 회생법원의 홈플러스에 대한 최후통첩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이순간 10만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 MBK와 채권단 메리트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용자금 2,000억원의 분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회생법원은 자금마련 계획이 없다면 홈플러스를 청산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트노조는 이재명정부에 회생법원의 최후통첩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홈플러스 청산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수백,수천번 이야기했음에도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지역경제가 붕괴됩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농어민들의 판매망과 생존권도 무너집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홈플러스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10만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무너집니다.

이재명정부가 지금처럼 의지 없고, 무능하다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감히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서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스스로 했었던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는 약속을 이제는 실행해야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홈플러스 정상화약속 이행하라!

[붙임 3. 현장발언_손상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 손상희입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할 회생기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중소상공인, 배송노동자를 포함한 10만 명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민생의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회, 법원을 찾아다니며 수없이 호소했습니다.

멀쩡하게 영업하던 기업이 투기자본 MBK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임금 걱정과 대출로 생계를 버텼고, 협력업체는 납품대금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물건이 없어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단식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절규하고 있는 사이 버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외쳐왔지만 정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온라인 배송을 맡은 운송사에 운송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세 운송업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배송업무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온라인 주문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운송사 직원들 역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배송의 중단은 단순한 배송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사업은 기업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홈플러스가 멈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광화문에서 4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고, 저 역시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부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고 국민의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회생이나 청산이나를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법원이 청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10만 명의 삶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며, 가족의 생계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 중소기업인과 협력업체, 배송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홈플러스를 살리고, 10만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4. 발언1_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 매출 8조에 달했던 대한민국 2위의 유통 대기업이 회생이나 아니면 청산이나 하는 갈림길인 7월 3일이 바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현 홈플러스 문제는 단순히 일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명 노동자와 중소기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지역경제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경제생태계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 온 투기자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면죄부를 줄거나 말거나라는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수년간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 삼보일배 등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상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바쳐야 합니까?

이제 정부가 답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답 해야 합니다. 없는 길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면서요. 홈플러스를 살리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수수방관 합니까. 말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여당에 대한 준엄한 민심의 경고입니다. 내란에 맞서 함께 싸워온 그 정신과 내란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에 대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지지율에 취해 내부 권력투쟁만 일삼는 행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찌 회초리를 만들수가 있겠습니까.

홈플러스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홈플러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이 내뱉었던 올바른 정치, 민생, 노동존중이란 말은 명백한 기만이고 무능에 대한 자백이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은 약탈적 사모펀드 규제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5. 발언2_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결정 시한인 7월 3일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 노동자와 가족,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를 포함한 10만 명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직영 노동자 2만 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노동자, 배송기사, 입점 점주까지 10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미 수천 개 협력업체는 평균 7억 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도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산이 결코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담, 지역경제 붕괴 비용, 그리고 국민연금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손실까지 고려하면,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은 기업을 훼손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이 위기 앞에서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홈플러스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없는 길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은 법원의 청산 검토와 40일이 넘는 단식농성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즉각 가동하고, 유암코 등 공적 관리 주체를 관리자로 선임하여 홈플러스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개선과 자금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자본을 살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책임 규명과 수사도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투기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십시오.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붙임 6. 기자회견 사진]





